

동물복지, 경제성과 시장성 있어야 실천 가능

국내 가축 사육시 선진국 수준 향상 불가피 종사자들 교육·행동지침 마련 등 서둘러야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이 지난 12월 5일 aT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농장동물복지의 국내외 동향'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동물복지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질향상 등을 통해 축산농가에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계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이 지난 12월 5일 aT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농장동물복지의 국내외 동향' 학술심포지엄에서 강연자들은 한결같이 "동물복지의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경쟁력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동물보호협회(WSPA)의 Amy Firth 농장동물복지 담당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농장동물 복지 향상은 생산비용으로 연결되지만 이는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강조하고 영국을 중심으로 한 EU국가의 동물복지 동향을 설

명했다.

OIE의 Sira Rahman 박사는 이와 관련하여 OIE가 지난 06년 이미 운송, 도축 및 살처분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10년까지 동물생산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을 설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농장동물 복지 문제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동물복지형 축산 경제성과 시장성 있어야 실천 가능

이와 관련하여 연성찬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교수 또한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이미 해상·육상·항공운송은 물론 도축, 살처분에 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규정에 대응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 교수는 “OIE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볼 때 국내 시설이나 기준이 크게 못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종사자들의 교육과 의식이 중요하다며,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광호 전남대학교 교수는 “동물복지형 축산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상승 및 토지 제약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농가 입장에서 경제성이 있고 시장성이 있어야 실천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각종 개발이 최근 환경문제로 이슈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에만 목표를 둔 기존의 축산방법은 결국 많은 방역비용, 환경 및 안전성 문제, 소비위축 등으로 개인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동물복지 축산을 하게 되면 환경개선 효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 공동체 상호작용, 관광축산, 소비촉진 등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시설비 투자에 따른 보조금 및 인센티브제 도입 △방목형 목장보다 운동장 등 우리실정에 맞는 기준 설정 △동물복지형 자동화·기계화 △가족경영 중심의 맞춤형 축산물 생산 △품질인증제도 등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최염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장은 “국내 동물보호법은 지금 출발 단계이다”며 “향후 가이드라인이나 시행에 관한 역할 분담을 위해 이해집단과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통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안성서 전국 최초 ‘동물복지’ 조례 입법예고 ·

경기도 안성시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동물복지가 통상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지난 12월 5일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한 ‘동물복지농장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전남대 조광호(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팀이 만든 ‘농장동물 복지인증 프로그램 매뉴얼’과 영국의 ‘가족 5대 자유’에 기반을 두고 마련됐다. 이에 시는 조례안에 소, 돼지, 닭의 사육방식과 약물 사용, 수송, 도살, 유통에 이르기까지 각각 100여 개의 지침을 마련 중이다.(또 사육밀도와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 개선, 가축전염병 관리 등 방역, 동물스트레스 저감방안 등 동물복지농장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인증농장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축산물의 생산과 도축 과정에서 동물복지를 준수하지 않은 생산물에 대해 수입규제 움직임이 있어 동물복지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도**